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태안지역의 사회경제적 변동 사회적 재난의 파편화(fragmentization)와 사사화(privatization)\*

Socio-economic change of TaeAhn resulted from Hubei Spirit Oil Spill:  
Fragmentization and Privatization of Social Disaster

박순열\*\*·홍덕화\*\*\*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는 연안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태안지역에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비록 연안생태계와 지역공동체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은 지연되고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복원의 지연을 총체적인 접근과 분절화된 접근이라는 인식 방법에서의 대립과 사사화와 사회화라는 사회적 대응양식의 대립이라는 두 개의 틀로 분석한다.

정부는 기름유출사고에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한 듯 보이나,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인 피해간의 상호작용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 결과는 피해와 복원을 주로 경제적 보상과 법적 이해당사자간의 해결로 다루게 된다. 삼성중공업은 사고에 대한 분절화된 인식과 사고 책임을 법적인 것으로 환원, 지역주민들의 회유를 통해 해결과정을 사사화함으로써 책임을 최소화하려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주로 IOPC로부터의 경제적 보상에 치중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총체적인 인식과 사회화 전략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지역주민들이 대책위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철회하였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지역의 보수적인 사회정치적 조건은 지역공동체가 전체적이고 갈등을 사회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집합적 행동의 여지를 거의 주지 않았다. 그 때문에 태안지역에서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KRF-2008-321-B00113).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sypark@snu.ac.kr)

\*\*\*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fruiholic@gmail.com)

의 사회적 복원과정은 지연되고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어: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사회적 재난, 파편화, 사사화, 환경  
갈등, 공동체 복원, 태안

## 1. 서론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단과 허베이 스피리트호와의 충돌로 12,547kℓ(10,900톤)의 기름이 유출되었다. 유출된 기름은 태안군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근흥면 등 만대해안에서 신진도 주변해역까지 70.1km의 해안에 유입되었고, 그 여파는 제주도 조천읍 해안까지 이르렀다.<sup>1)</sup> 2009년 5월 마감된 제한채권 신고에 따르면 기름유출로 인하여 양식장 34,317ha(충남 15,300ha, 전남 19,017ha), 해안선 1,218.3km(충남 1,105km, 전남 113.3km), 충남지역 해수욕장 15개소, 충남지역 음식숙박업소 7,20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충남도 34개 피해대책위원회에 ‘신고된’ 피해건수는 70,969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수산분야가 81.4%(57,781건),

- 1) 본 연구팀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라 부르는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는 사회적·정치적 쟁투의 과정이고, 또 그것의 산물이다. 서로 다른 이름을 둘러싼 쟁투는 사고의 사회적·정치적 의미에 대한 경합이자 사고와 관련된 행위자를 특정한 방식으로(가령, 사고의 책임자, 사고로 인한 피해자) 호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직후 ‘태안기름유출사고’, ‘서해안기름유출사고’, ‘서해안유류오염사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삼성-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었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굳어져가고 있다. 사고명칭에 지역이 빠지는 과정은 특정 지역에 부가될 수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이고, 삼성중공업이 사라지는 과정은 사고와 책임의 주체로서 삼성이 사회적·법적으로 면제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이 가장 적절한 사고의 명칭인지,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이름이 지어지고 바뀌어지는 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 글에서는 연구팀의 명칭을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한다.

관광 등 비수산 분야가 18.6%(13,188건)이다(2009년 11월 25일 기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생태적 재난은 연안생태계와 상호작용하는 지역공동체,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전 방위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박재묵, 2008; 이시재, 2008, 2009; 노진철, 2009; 김교현·김선중, 2008, 2009). 특히 방제과정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등의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상흔을 깊이 새겼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신고되거나 파악된 피해 이외에 과학적, 경제적 용어로 포착될 수 없어 ‘신고될 수 없는’ 연안 생태계와 지역공동체의 파괴와 교란, 그리고 그것의 장기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대부분의 기름이 유입된 태안군은 생태적 재난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사회적 재난을 경험한 지역으로 본 논문의 주된 연구 지역이다.<sup>3)</sup>

그러나 12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포함, 총 213여만 명이 참여하여 4,175kl의 폐유와 32,074톤의 흡착폐기물을 수거(2008년 10월 10일 기준임. 태안군, 2010a: 79)함으로써 기름유출의 외형상의 흔적은 사라져가고 있다. 정부는 충남 6개 지역과 전남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607억 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희망근로사업을 포함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어업경비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

2) 홍덕화·구도완(2009)은 사고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서 현존하는 제도적 맥락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자연의 피해,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맨손어업과 무자료 거래와 같은 경제행위,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 건강 피해 등으로 이미 언급하였는데, ‘신고될 수 없는’ 피해는 세 번째와 유사하지만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3) 사회적 재난은 생태계의 오염과 교란으로 인한 생계활동의 중단, 그에 따른 경제적 곤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감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그리고 국가, 기업, 지역 주민에 대한 불신과 갈등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위기와 혼란에 처한 상황을 의미한다(박재묵, 2008).

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시행령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다각적인 복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외부 시민단체와 기업 등의 협력과 지원 덕에 외형상으로는 지역공동체가 사고 이전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비가시적이거나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생태계의 교란과 그 부정적인 효과, 그리고 태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경험한 미증유의 혼란, 갈등, 상처 등이 치유되고, 복원되었다고 하기에는 힘들다. 사고 발생 2년 3개월이 지난, 2010년 2월,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하고 원만한 배상을 촉구”한다는 유서를 남긴 피해주민의 자살은 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재난의 심각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가해자 무한책임, 완전복구, 완전책임”을 요구해온 지역주민과 대책위원회들의 요구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책임(자)을 규명하고, 생태계와 지역사회를 복원하는 과정은 더디고 또 어긋나고 있다.

생태적·사회적 재난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적 대응과 복원은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생태계와 지역공동체의 총체적인 교란, 지역 공동체의 혼란·좌절·갈등 등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제도로 수용되고, 또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물론 생태적·사회적 재난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며,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다(홍덕화·구도완, 2009).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과정은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피해의 복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좌우된다. 즉 인식 방식의 전체화(holisticization)와 파편화(fragmentization) 경향과 대응 과정의 사회화(socialization)와 사사화(privatization) 경향의 결합양식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피해복원이 전개되는 방식이 달라진다. 전체화는 연안생태계와 지역공동체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고, 생태계의 훼손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동, 개인의 미세한 건강·심리상태의 변화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이를 연속선상에서 인식한다. 반면 파편화는 연안생태계와 지역공동체의 관계, 지역공동체 내부의 관계 간의 상호작용보다는 그것들

각각을 개별적으로 파악한다.<sup>4)</sup> 한편 사회화는 피해보상 및 복원과 관련된 일련의 정치적·정책적 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행위자가 참여하고,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는 경향을 말한다. 이에 반해 사사회는 복원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이슈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하여 해당 문제를 사인(私人) 간의 관계에 묶어두려는 경향이다.<sup>5)</sup> 따라서 전체화는 피해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복원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되고, 사회화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복원이 보다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파편화와 사사회는 특정 영역 또는 특정 행위자 중심의 복원으로 이어져 복원을

4) 환경오염은 생태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주민들의 건강과 삶, 나아가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각각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만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Iijima, 1992; Edelstein, 1988). 그러나 환경문제의 물질적·사회적 상호구성성은 흔히 간과되기도 한다. 올리버-스미스(Oliver-Smith, 2004)와 카도나(Cardona, 2004)는 환경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론적 관점(holistic perspective)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자연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들은 전체론적 관점이 취약성(vulnerability)을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드라이젝(Dryzek, 1995)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기존의 사회제도들이 자연과 사회를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행위자들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생태적 합리성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제도를 환경문제를 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회적 대응양식으로 보는데, 이는 전체화된 인식과 사회화된 대응을 토대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사회화와 사사회는 정치의 과정과 결과는 갈등을 구성하는 네 차원, 즉 갈등의 범위, 갈등의 가시성, 갈등의 강도, 갈등의 방향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샤프츠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가 사용한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갈등의 범위는 누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등에 관여하는 가인데, 새로운 참여자가 갈등에 들어오면 힘의 균형이 바뀌고 그 결과 또한 달라진다. 갈등의 범위는 외부의 개입 없이 갈등이 사적인 채로 남아있도록 하려는 사사회하는 방향이나, 반대로 더욱 많은 사람이 갈등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사회화(socialization)라는 서로 대립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보통 사적인 영역의 강자는 갈등을 사사회함으로써 결과를 결정하도록 하는 반면, 사회적 약자들은 힘의 균형이 변할 때까지 더욱 많은 사람들을 갈등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사회화 전략을 취한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사회화하는 가장 커다란 힘이라고 할 수 있다(Schattschneider, 2008: 30~31).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재난 이후 복원 과정에서 전체화와 파편화, 사회화와 사사화 경향은 끊임없이 경합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쟁투도 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쟁투의 결과가 복원의 경로를 결정하기에 본 논문에서는 재난 이후의 대응과정을 전체화/파편화, 사회화/사사화의 틀을 사용한다.

본 논문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태안지역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팀의 1차년도 연구 성과를 토대로 2009년도 이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복원이 지연되고 차별화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분석의 주된 시기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이고, 자료는 2009년 9월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자료<sup>6)</sup>와 2009년 12월, 2010년 1월과 3월, 5월, 8월의 현지 조사자료, 서울과 지역의 언론보도, 그리고 문헌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 2. 태안의 사회경제적 변화

### 1) 경제적 변화

기름유출사고는 태안군을 중심으로 인근 연안생태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함으로써 어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관광객의 감소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다시 어업, 관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역경제활동을 위축시켰다(이시재, 2008; 2009).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수산물 어획고는 2007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 어류와 패류의 어획량이 급감하였다. 통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어획량의 감소는 더 크고, 그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충격 역시 더 심각했을 것 추정된다.<sup>7)</sup>

6) 설문조사의 질문 및 척도 구성은 이시재(2009)를 참고.

수산물 어획량의 감소와 그로인한 지역경제의 위축은 수산물 계통 판매고의 변화를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판매 수량을 보면 어류는 2007년 판매수량의 1/3, 갑각류는 1/2, 연체동물은 1/5 수준으로 감소했다. 가격변동으로 인해 판매금액은 판매수량만큼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판매금액은 2007년 500여억 원에서 2008년 280여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무거래 등을 감안한다면 사고로 인한 수산물 피해규모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사고로 인한 피해는 관광업 분야에서도 심각했다. 2008년 태안지역의 관광객 수는 2007년 대비 무료 관광지의 경우 22%, 해수욕장의 경우 26% 수준으로 감소했다. 수산업과 관광업이 태안군의 경제활동의 기반임을 감안하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2년여 가까이 태안군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공황상태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sup>9)</sup>

7) 공식적인 수산물 어획고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다. 2009년도 수산물 어획량은, 공식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2008년에 비해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표 1 > 수산물 어획고 변화(단위: M/T)

연도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패류	해조류	기타	합계
2007	6,993	1,255	1,255	·	2,212	9,082	20,797
2008	3,463	1,780	2,182	2,365	·	·	9,790

\* 출처: 태안군 통계연보(2009)

\*\* 2007년은 패류 항목이 없음. 기타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

\*\*\* 2008년 해조류 기타 항목 상세정보 없음.

8) 수산물 판매 현황은 < 표 2 > 와 같다.

< 표 2 > 수산물 계통 판매고(단위: ton, 백만 원)

연도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패류		기타		합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7	3,379	12,493	1,142	12,305	7,779	21,763	1,240	3,183	4	35	13,543	49,779
2008	1,094	11,545	663	9,487	1,689	6,899	·	·	·	·	3,446	27,931

\* 출처: 태안군 통계연보(2009)

\*\* 해조류 관련 통계 누락됨.

2008년 10월 이후 방제작업이 마무리되고 연안생태계가 외형상 복원되면서,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관광촉진 행사를 개최하면서 태안지역 관광객의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6월말까지의 관광객 수가 388만 2000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여 기름유출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대전일보》, 2009.8.11). 그러나 2009년 4월에 개최된 안면도 꽃박람회에 200여만 명이 방문하였고, 관광객 수의 증가가 태안지역 내에서 불균등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태안지역 전체의 관광업 수준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sup>10)</sup> 관광정보시스템에 집계된 주요 해수욕장별 관광객 수의 변화는 지역 내 불균등한 회복추이를 잘 보여주는 데,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의 2009년 방문객 수는 2007년을 능가하지만 구름포 해수욕장이나 의항 해수욕장은 2007년의 20%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가 심한 지역의 회복이 느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명도에 따라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 구름포·의항 해수욕장과 같은 지역에 위치한 만리포 해수욕장의 경우 60% 수준의 회복세를 보여 20%에 그친 구름포·의항 해수욕장과 크게 다르다.

기름유출사고 직후 극심하게 위축되었던 어업, 관광업, 식당업, 펜션

9) 관광객수 변화 추이는 <표 3>과 같다.

<표 3> 관광객 수 추이 변화

연도	2005	2006	2007	2008
무료관광지방문객 수	-	20,076,955	20,301,328	4,437,306
해수욕장 이용자 수	12,022,000	13,642,120	13,803,840	3,586,371

\*출처: 태안군 통계연보(2009)

10) 태안군은 2010년 태안군 해수욕장 방문객수가 670만 명(2010.8.19. 기준)을 넘어서서 2009년 대비 4% 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입장료 수입과 주차비 등을 근거로 태안군의 공식 집계는 부풀리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례로 6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된 같음이 해수욕장의 경우 입장료 수입을 근거로 추정하면 1만 명 수준에 지나지 않아 태안군의 집계와는 5만 명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태안신문》, 2010.8.25).

업 등 지역의 주 소득원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그 역시 지역, 업종, 그리고 산업에 따라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2008년에 지급된 긴급생계안정자금, 주민방제비, 각종 취로사업 등은 어업, 관광업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는 해주었지만, 사고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 특히 저소득층이 사고 이전의 생계활동을 되찾지 못한 채 정부의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임시적인 일자리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불안정성이 높아졌다.<sup>11)</sup> 정부는 기름유출사고 이후 피해주민의 생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다. 2008년도는 특별공공근로사업(3,345명), 일자리 창출사업(3,162명), 그리고 2009년도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를 입은 태안군에서만 실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태안군은 특별지원지역으로 인정받아 56억 원을 추가 배정 받았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6월부터 6개월간(2009.6.1~2009.12.24) 하루 평균 1,338명이 참여했다(태안군, 2010a). 2009년 태안군의 전체 인구가 63,095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주민이 임시적인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도의 관련 예산은 2009년도의 15% 수준인 17억 원으로 삭감된 상태이며, 군비 1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피해주민들의 요구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sup>12)</sup> 공공취로사업은 그 자체로 충분한 수

11) 경우에 따라선 사고 이후 생태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리의 경우 굴 양식장을 철거한 갯벌에 바지락이 대규모로 서식하기 시작했는데 굴 양식을 하지 않고 주로 맨손어업에 의존해 온 노인층은 바지락 채취 덕분에 이전보다 벌이가 나아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있다. “그게 저희들도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 나중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 연로하신 분들은 굴 작업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지락이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긴 한데, 또 내년에 안 나오면 ... 불안불안한거죠”(이○○, 2010.8.24).

12) 2010년 희망근로 참여 신청 결과, 참여 희망자는 1,656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 438명(65세 이상 227명, 이하 211명)만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태안신문》, 2010.3.3).

입 대체효과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기 때문에 풍요롭지는 않지만 자립적인 생계활동을 유지해오던 지역주민들이 장기적인 삶을 계획할 수 없도록 하고, 경제활동을 포함한 미래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이 단순 작업, 1회성 사업이 대부분이라 기름유출사고로 파괴된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태안군에서 제시한 ‘생산적’ 희망근로 사업들도 ‘독살복원’을 제외하면 전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 배·보상은 정부의 IOPC 협상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0년 8월을 기준으로 배상청구건수 24,667건 중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757건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비수산분야에 집중되어있다. 배·보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수산분야의 조업제한 기간 문제가 IOPC와의 타협으로 해결되면서 2010년 말부터는 수산분야의 보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낮은 보상율과 이후 민사소송의 가능성 등을 감안했을 때 피해 배·보상이 일단락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는 피해주민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대부금 지급이 9천 건 넘게 이뤄지기도 했다.

<표 4> 태안군 배·보상 신청 및 사정현황

단위: 백만 원, 2010.8.3. 현재

구분	피해신고 건수	배상청구		IOPC승인		배상금 지급		대지급금		대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산	14,410	14,245	457,415	659	1,238	5	235	3	157	9,358	27,247
비수산	11,021	10,422	148,420	974	11,539	752	8,292	7	61	87	404
계	25,431	24,667	605,835	1,633	12,777	757	8,527	10	218	9,445	27,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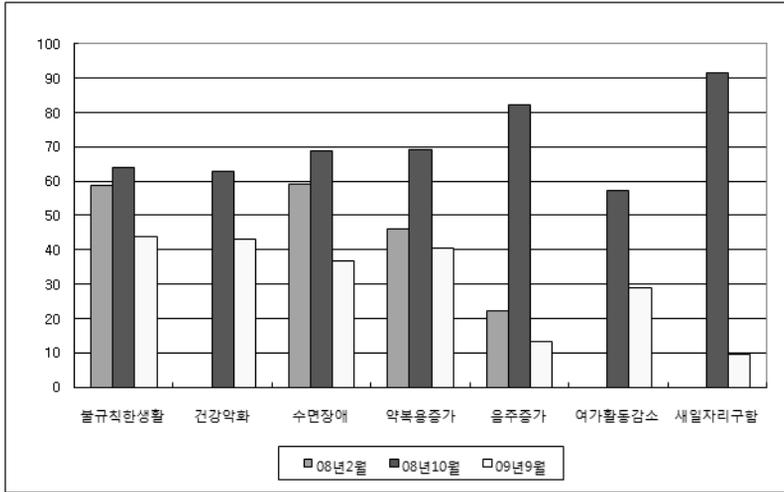
\*출처: 태안군(2010b).

## 2) 개인의 일상 및 신체적 변화

알래스카의 엑스 발데즈호의 기름유출에 따른 사회, 문화,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지역공동체는 사고 이후 사회적 관계의 축소, 자급적인 생산과 분배 활동의 쇠퇴, 음주·약물중독·가정폭력의 증가, 건강상태의 악화, 정신적 불안 등을 경험한다(Davis, 1996: 243~244). 연구팀의 조사결과를 보면 태안지역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태안지역 30% 이상의 주민들이 기름유출사고로 생활이 불규칙해졌고, 건강이 나빠졌으며,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또한 약물 복용이 증가한 주민들도 사고 후 2년이 넘게 지났지만 30%가 넘는다. 여가활동이 감소한 주민도 30% 가까이 된다. 불규칙한 생활, 나빠진 건강, 약물복용의 증가, 그리고 여가활동의 감소는 주민들의 개인적 신상 및 건강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것의 효과는 개인에 머무르지 않는다. 악화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가족 간의 관계를 포함한 다층적인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키고, 지역의 공동체성을 악화시킨다. 다행스러운 것은 2008년 10월 조사와 비교해보았을 때 주민들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적인 변화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줄어들었고, 특히 사고 후 술을 더 많이 마신다는 응답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1, 2, 3차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피해주민들은 사회갈등이 지역사회를 휩쓸고 간 2차 조사 시기를 전후로 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고, 2009년 이후로는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과는 별개로 피해주민들의 또 다른 건강 악화가 발견되고 있다. 태안환경보건센터(2009)에 따르면, 피해주민, 특히 장기간 방제작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악화를 경험하고 있다.<sup>13)</sup> 대표적인 사례로 사고 이후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고 병원의 치료를 받는 주민의 비율이 증가했다. 피부염이나 결막염 증상을

<그림 1> 개인 신상 변화



호소하는 비율은 2~5배, 천식 및 비염 증상 호소율은 1.2~2배 증가했다. 더불어 피부염·결막염으로 인한 병원치료 비율은 1.5~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방제작업에 참여한 기간이 길수록 화학물질 과민증이 의심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집중피해지역의 주민들은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화학물질 과민증 유병율이 4~10배 높았다. 또한 방제작업 참여과정에서 PAH(다환방향족 탄화수소)가 체내로 유입·축적되어 DNA의 산화적 손상과 지질 과산화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종료된 연구결과가 아니기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대로 건강적인 피해가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

13) 태안환경보건센터의 연구는 1차로 소원면, 원북면, 근흥면, 이원면의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남면, 안면읍, 고남면, 보령시 도서지역과 태안군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결과는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때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1차 결과 발표에 포함된 어린이 자료는 피해지역의 만 7~12세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다. 조사에는 총 13개 초등학교, 548명이 참여했다.

다.<sup>14)</sup>

기름유출사고는 주민들의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태안환경보건센터(2009)에 따르면, 사고 이후 피해주민들의 식단과 먹을거리 구입 패턴이 변했고, 그 결과 상당수 주민이 영양 섭취 문제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에 걸친 불균형적인 식단과 불충분한 영양섭취는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이는 다시 지역주민들의 생계활동과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일 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 식단을 보고 확인해보니까 바닷가 지역에서 방제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륙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밥상에 차려진 것이 훨씬 더 적더라는 거죠. ... 영양 섭취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 두 지역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원인으로는 ... 그동안 직접 잡아서 해먹고 하는 부분들이 양이 많이 떨어졌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수입원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투자를 적게 하다 보니까 적게 먹을 수밖에 없고, 다양한 반찬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어패류 채취해가지고 먹던 사람들일수록 더 변화를 크게 느끼고 있다. 어패류 섭취는 주로 섭취하는 어패류, 직접 사먹는 어패류 종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고, 사고 이전에는 주로 채취하거나 잡아서 먹었는데, 종종 날 것으로 섭취했는데, 현재는 채취하는 양도 적고 그것마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섭취할 감소하는 것들이 관측된다”(허○○, 2009.12.15).

14) 사고 이후 소원면 내 한 마을에서 암환자가 급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소원면 파도리는 사고 이후 마을에서 15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은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방제작업에 참여했는데, 방제용 마스크가 없어서 일반 마스크를 착용했고, 작업 도중 속이 메스껍고 따가운 증상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름유출사고 이후 유해물질 노출이 암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대전일보》, 2010.3.19).

특히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일상과 신체적 건강이다. 기름유출지점과 가까운 고노출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천식유병율이 저노출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노출 지역 어린이들의 천식유병율은 16.8%였는데, 전국 어린이 환경노출 건강영향조사 결과 가운데 천안지역(어린이 천식유병율은 8.4%) 및 울산지역(어린이 천식유병율 8.2%)과 비교해보면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연합뉴스》, 2009.12.7). 사실 태안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또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심각하게) 기름유출사고로 직접적인 심리적, 육체적 손상을 경험했다. 또한 성인들의 불규칙한 생활, 나빠진 건강, 약물 복용의 증가, 그리고 여가활동의 감소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차적인 문제를 겪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성인들의 고통이 전가되는 일도 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내에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떠나는 부차적인 위험과 고통에 대한 적절한 대책(에 관한 논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생태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야기하는 공동체의 유대, 그리고 문화와 관행의 파괴와 해체는 해당 시점에서의 성인들의 사고와 행위 패턴의 변화와 단속(斷續)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더욱 치명적인 효과는 세대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경험하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효과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시급하다.

15) 2010년 5월 소원면 만리포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9명을 집단 인터뷰한 결과, 청소년들 역시 기름유출사고의 피해에 노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사고 이후 부모의 다툼 증가, 건강 악화, 마을 분위기의 침체 등을 주된 문제로 꼽았고, 태안이 ‘먹고 살기 힘든 곳’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삼성중공업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삼성 측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안 도와주고 버리’는 드라마나 영화 속 인물들에 비유했다.

### 3) 사회적 변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변동을 보여주는 가장 가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는 지역의 인구변동이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인구의 유입이나 배출을 유도하는 새로운 요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태안군의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2007년도 63,041명, 2008년도 63,401명, 2009년 63,095명으로 기름유출사고 후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다. 이와 같은 인구변동은 분기별 전입출 변화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사고가 발생한 2007년 4/4분기부터 2008년 1/4분기까지 800여 명 가까이 순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증가했는데, 생계안정자금지원과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전입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급격한 인구 전입이나 전출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태안지역은 사고 이후 인구이동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대적인 인구의 유출이나 유입을 야기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이 없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름유출사고 직후 긴급생계안정자금의 배분이나 피해 배·보상의 요구와 같은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격렬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지만 2009년 이후로는 외형상 지역 내부의 갈등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연구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복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이웃 간 협력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사회적 관계와 연관된 항목들이다. 반면 가장 회복수준이 낮은 것은 가구소득, 양식업, 고기잡이, 바다생물이었다. 일하는 가족 수나 관광객 수, 농수산물 판매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비교일 뿐 전반적으로 회복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사회적 관계만이 50% 가량 회복되었다고 응답했을 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주민들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표 5 > 지역경제·사회관계 회복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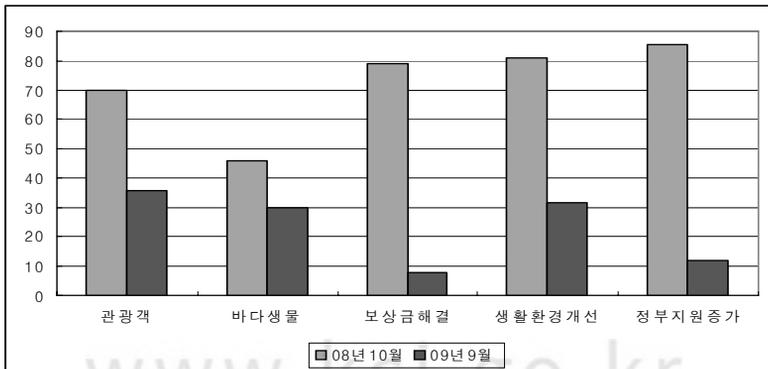
단위: %

	가구 소득	양식업	고기잡이	바다생물	일하는 가족수	관광객수	농산물 판매	수산물 판매	이웃협력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회복 응답율	25.1	25.8	29.1	29.7	35.3	35.9	38.7	41.5	52.1	52.3	56.0

2008년 10월 향후 1년 내의 변화에 대한 기대 응답과 2009년 9월 실제 평가를 비교해보면, 주민들의 기대에 비춰봤을 때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70% 이상의 주민들이 1년 이내에 관광객 수가 회복되고, 보상금 문제가 잘 해결되며,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정부지원이 증가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2009년의 평가는 관광객을 제외하고 모두 30%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보상금 문제의 경우 10% 미만의 주민만이 잘 해결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지원에 대한 평가도 낮았다. 훼손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취약성이 높을수록 회복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

< 그림 2 > 회복에 대한 기대와 평가



이라는 점이다.<sup>16)</sup> 이웃협력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에 있어 취약성이 낮은 집단은 70% 가까운 응답자들이 사고 이전으로 회복된 것으로 응답했지만, 취약계층은 40% 안팎의 주민들만이 사고 이전으로 회복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보상금 문제와 장래 전망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낮지만 특히 취약계층은 10% 미만의 주민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가구 소득의 회복에 대한 평가의 격차도 크다.<sup>17)</sup>

<표 6> 취약성에 따른 회복 평가

단위: %

취약성	가구 소득**	일하는 가족수**	이웃협력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보상금 해결*	장래전망**
높음	9.3	20.0	34.4	41.6	43.8	5.0	9.9
보통	28.7	42.0	60.7	55.2	62.4	7.0	25.5
낮음	45.9	50.5	69.1	65.6	67.0	14.4	24.2

\*p<.05, \*\*p<.01

태안주민들은 이웃협력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의 회복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회복 수준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편이다. 게다가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는 경제활동은 일시적인 것들이 많다. 그러나 지역

16) 취약성에 관한 질문 10개의 응답값을 합산한 후 하위 40%는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상위 25%는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했다.

17) 이에 반해 피해노출 수준에 따른 회복 평가는 다소 복잡하다. 무노출, 낮은노출, 높은노출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복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세집단간에 일관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가족관계의 경우 회복 평가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이웃협력관계나 친구관계의 회복에 대한 평가는 노출정도가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는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일하는 가족 수의 회복은 노출되지 않은 집단과 노출된 집단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단 피해에 노출된 경우에는 노출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복원과정에서는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피해노출 정도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사회관계의 회복 수준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여전히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은 찾아보기 힘들고, 지역 사회내부에서 정치적 의제로 심각하게 다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 3. 주요 행위자의 인식과 대응양식

기름유출사고는 생태계의 훼손과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갈등, 개인의 심리·건강악화 등 포괄적인 피해를 야기했다. 이처럼 피해가 포괄적인 성격을 가졌던 데 반해 주요 행위자들은 생태계-사회-개인의 다층적인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대응을 하였다. 피해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어 각각의 피해는 분절적으로 다뤄지거나, 사회적 의제에서도 사라졌다. 이러한 파편화의 경향은 피해보상 및 복원이 사사화되는 과정과 맞물려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를 장기화시키고,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 1) 정부

사고발생 직후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한편으로는 방제작업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했다.<sup>18)</sup>

18) 방제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피해조사 추진 등을 목적으로 2008년 3월 국토해양부에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보상 지원단’을 구성하였다. 지원단의 주된 업무는 지원총괄, 청구지원 및 쟁송, 지역지원, 대책/조정위원회, 국제기금협력, 대지급관리, 대부관리 등이다. 농수산부의 경우는 ‘수산피해대책본부’를 초기에 가동하다, 2008년 12월부터 ‘피해어업인 지원단’으로 전환하였다. 주요업무는 생계지원, 소송, 서무, 홍보 지원, 피해 집계, 특별법, 방제업무, 복원 등이고, 농수산부의 관련 부서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에는 피해배상지원팀과 방제복구, 민생경제지원, 인력지원, 환경생태 복원반, 지역발전 지원반 등으로 구성된 항구복구지원팀으

중앙정부, 충청남도, 태안군은 피해 배·보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해양환경 복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2008년 18개 사업에 1,038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관광홍보와 콘서트 등 3개 사업에 6억 원, 농식품부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에 170.5억 원, 승마타운조성에 3.5억 원을 지원했다. 국토해양부는 전체지원액의 65%인 680억 원을 지원했는데, 국도 38호선 건설에 312억 원, 대산항 건설에 280억 원, 연안항 개발에 10억 원, 장항산단 진입로 공사에 78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행안부, 환경부, 노동부 공동사업인 특별공공사업에 152.8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밖에 복지부(6.1억 원)와 환경부(23.6억 원)도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했다(국토해양부, 2010: 188~200). 또한 2010년부터는 국토해양부가 특별해양환경 복원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충청남도과 전라남·북도 12개 시·군 해안과 섬지역에 향후 10년간 4,786억 원이 투입되는 해양환경복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장기 생태계 모니터링,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 사업에 790여억 원을 투입하고, 농림수산부는 피해어장 환경복원, 오염어장 생태계 개선 등에 3,821억 원<sup>19)</sup>을 사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73억 원을 투입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사업을 펼친다.<sup>20)</sup> 한편 태안군은 환경보건센터를 설립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사회심리사업(개별상담-296건, 아동집단 프로그램-3개교, 아동스트레스 완화캠프-1회, 주민 집단 프로그램-3회)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로 이루어진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대책지원총괄본부’가 구성되었다(국토해양부, 2010: 104~112).

- 19) 농림수산부의 예산은 인공어초 조성사업, 바다목장화 사업 등 기존사업 예산 1,744억 원이 포함된 액수이다.
- 20) 전체 예산의 지역별 배분에 대해 주민들은 불만을 표출했다. 한 지역주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규모가 태안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지역이 한 곳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적어도 충남도 사업비의 70%까지는 태안에 배정되어야 기름사고로 얼룩진 태안 앞바다를 되살린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0. 2.4).

표면적으로 정부는 생태계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정신보건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자 했지만 각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적 대응은 아니었다. 예컨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실제 집행된 사업비는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도로와 항만 건설이나, 전시성 사업에 대부분 투자되었다. 2009년도 경우에는 총 825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약 78%인 642억 원을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도로와 항만건설에 지출했다(국토해양부, 2010: 188~200). 지역경제 활성화의 명목으로 추진된 수산물 소비 촉진행사(2008년 8회, 2009년 2회), 지역축제(2008년 31회, 2009년 18회),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상품권 판매 등도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중 태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된 것으로 홍보되고 있는 지역축제 현황을 보면 실상은 사고 이전부터 개최되어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가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지역신문 기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벤트 행사는 태안 군내 업체가 아니라 외부업체에 의해 주도됐다고 한다. 그는 태안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태안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태안 주민 주도의 이벤트, 태안 주도의 장기적 발전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무원 사이의 견해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태안군의 유통피해대책지원과에서 일하는 김○○은 사고 초기에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찾아가면 각 부처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으나 최근에는 “출장을 가보면 뭐하러 왔느냐”고 반문한다고 토로했다. 환경보건센터에서 일하는 허○○ 또한 중앙부처가 더 이상 관여하기를 꺼린다고 비판했다.

“정부(환경부)는 할 만큼 했지 않느냐. 가해자가 있지 않느냐, 가해자랑 이야기를 해봐라. 이제는 앞으로 조사를 하든, 그 비용은 그 사람들한테 타내야할 것 아니냐. 정부 예산 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허○○, 09.12.15).

주된 정부의 대응은 피해 배·보상과 관련된다. 그마저도 사고 책임자에게 원상복구나 철저한 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현행 법과 제도 내에서 피해자들의 배·보상에 국한되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부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사고를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아닌 절차적 문제로 국한된다. 2008년 6월 정부가 지출한 방제비용, 지역이미지 개선 홍보비용 등 국제기금에 손해배상 및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1,100억 원 가량의 정부채권을 피해주민의 손해 배·보상 이후에 받는다는 후순위선언(SLQ, Standing last in the queue)을 했다. 2009년 5월 27일에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도 배·보상을 받지 못한 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는 IPOC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제기금이 인정한 총사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를 보상하겠다는 것을 명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민박업자에 대해 소득추계를 우선 적용하여 보상을 진행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도 했다.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한 주민들을 위해 대지급금과 대부금도 지급했다.

생태계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은 부처별로 분할되어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나마 관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 악화와 관련한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하지만 ‘조사’의 차원을 벗어나지 않고, 환경보건센터의 사업은 1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태안환경보건센터, 2009). 극심한 사회갈등을 겪은 지역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처럼 정부의 대응은 외형상 전체화의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분절화된 채로 진행되었다.

정부는 피해주민의 배·보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실제 사정이나 지급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IPOC는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사정을 하며 여기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피해주민이 몫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 배·보상은 1차적으로 IPOC와 피해주민의 쟁송

문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IOPC와 피해주민 간의 피해입증과 보상 문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원활한 피해 배·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경제적으로 피해주민을 돕는 것을 넘어서지 않는다. ‘보상 받지 못한 자’ 등의 문제는 IOPC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쟁점이 되고, 가해 책임의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된다.<sup>21)</sup> 결과적으로 정부는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 피해 배·보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피해 해결과 피해 보상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전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피해’를 만들어낸다. 이는 파편화된 대응과 사사화 전략이 야기하는 불가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2)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사고 이후 무엇보다 기름유출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며 법정 소송을 통해 사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홍덕화·구도완, 2009). 사고 직후 삼성중공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고,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주장이 1심과 항고심 이후 제기되었지만 삼성은 대응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삼성은 재판 변호를 통해서만 대응했다. 그 결과는 2009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책임 소재와 범위에 관한 주요한 재판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중공업의 입장에 유리하였다. 피해 배·보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재판은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 절차 개시신청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두 사건 모두 책임제한을 인정받았다. 특히 세간의 관

21)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늘 언론에 대하고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가 IOPC 사정 기준만을 받아들여야 하는거나, 대한민국 민법, 상법 다 있는데, 왜 삼성중공업한테 청구하려면 대한민국 민법, 상법으로 청구하면 되는 거지, 왜 IOPC에서 사정하는 것만큼만 해야 하는거나. 삼성중공업에서는 이런단 말이죠. 아니 특별법도 만들어서 사정하는 대로 준다는 데, 또 뭘 받으려고 하느냐. 특별법으로 다 받는데, 왜 우리한테 달라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구○○, 2009. 12.15).

심을 모은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 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항고심 판결이 2010년 1월 24일 내려졌는데, 결과는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인선단은 상법상 선박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의 일종”이고, “예인선 선장 등의 운행도 사고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무모한 행위로 불 정도도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한겨레》, 2010.1.25).<sup>22)</sup>

이와 같은 판결은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이 삼성중공업에 있다고 판단 하여, ‘가해자 무한책임’, ‘완전배상’, ‘완전복원’을 주장했던 주민들의 의견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은 가해기업의 책임을 사회화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IOPC와의 지난한 보상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조직하지는 못했다.

<표 7> 기름유출사고 관련 재판 진행 상황

단위: 백만 원

사 건	손해배상	손해배상	생계비지급 가처분	생계비지급 가처분	(선주)책임제한 절차개시신청	(선박)책임제한 절차개시신청
원 고	국용복외 5391명	김규상외 2234명	국용복외 6863명	김규상외 762명	허베이 스피리트선박	삼성중공업
피 고	삼성 중공업외	삼성 중공업외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접수일	08.5.30	08.10.30	08.9.12	08.9.30	08.1.15	08.12.22
소 가	1,078.4	447	20,592	2,289	142,500	5,000
결 과	진행 중(병합)		진행 중	진행 중	배상책임 1,425억제한 (2009.2.9/대전지법)	배상책임 56억제한 (2010.1.24/고법)

\*출처: 유류피해대책위원회(2009)

22) 사고 당시 상법은 사고 가능성을 알고도 무모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선박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피해주민들이 가해 책임과 피해 배·보상의 문제를 사회화하지 못한 데에는 삼성중공업의 감춰진 사사화 전략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사법제도를 포함한 공식적 제도 내에서의 무대응과 달리 삼성중공업은 2008년부터 피해 마을과의 자매결연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태안에 상주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직원들의 활동 내막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추정해보면 사고의 ‘책임자’로서의 삼성중공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고, 지역주민들을 회유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 어촌계장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직원들은 집요하게 피해주민들을 만나서 회유하고 있다.

“저는 스톡커 수준 이상으로 시달렸어요. 전화라든지 만나서라든지 삼성중공업의 하수인들이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 그 사람들이 진짜 집요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집요한데, 저는 끝까지 안 넘어갔어요. 하도 그랬더니 저랑 가까운 후배를 시켜서까지 오더라고요. … ○○ 1, 2, 3, 4지역을 이번 2심전에 해결을 하면 2심에서 재판부가 결국 받아줄 거 아니냐, 책임제한 신청에 대해서, 그런 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구○○, 2009.12.15).

삼성 측의 은밀한 전략은, 특히 자매결연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상당수의 마을이 자매결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소원면 내 13개 마을이 삼성측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 중 하나인 ○○리는 마을회관 신축 공사비용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지원받았다.<sup>23)</sup> 이처럼 은밀한 회유와 지원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피해주민들이 삼성중공업에 대항하여 결집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삼성중공업의 사사화 전략은 피해에 대한 파편화된 인식을 전제한다.

23) 한 구술자의 말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내부적으로 소원면 내 15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삼성측은 사고의 책임이 자신들을 겨냥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공식적 배·보상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피해를 경제적인 것으로만 환원시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확산시켰다. 삼성의 태안사랑 상품권 구매가 대표적인 예다.<sup>24)</sup> 태안사랑 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혜택이 주로 3차 산업 종사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1차 산업 종사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실제로 지역신문 기자인 신○○에 따르면 “상품권은 ... 어민들 입장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제일 피해를 본 것도 어민들인데 애들이 또 나를 무시하나, 그 의식이 굉장히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삼성직원들이 시설이 좋은 펜션과 식당을 주로 이용하면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 간에도 불화가 생겼다. 삼성이 공동의 투쟁대상이 아닌 외부지원자로 전환되면서 삼성의 지원이 공동체 내부의 균열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만큼 군청 관계자가 다른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우리는 그런 거(상품권 구입을 말함)보다 수산 분야에 조금 투자해라. 예를 들어 종패 살포, 치어방류, 불가사리를 잡는다던지, 이런 거를 직접 어촌 분야에 도움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화합이 될 테니까. 그런데 굉장히, 직장인이니까 거기서도 결제를 맡아야 되니까, 아주 공무원들 사고보다 더 끔찍해요. 아주 그런 아쉬움이 있죠”(김○○, 2010.8.24).

피해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과 지원이 삼성 측의 목표가 아니었던 만

24) 태안사랑 상품권의 구매현황을 보면 2008년도는 전체 32개 기업이 참여하여 74억 원 가량을 구매하였는데, 이 가운데 삼성계열사가 19개, 금액으로 62억 가량을 구매했다. 2009년의 경우에는 총 4개 기업이 30억 8천만 원어치를 구입하였는데, 이중 삼성중공업이 30억 원어치를 구입하였다(태안군, 2010a: 322).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에는 삼성중공업이 50억 원어치의 태안사랑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한다.

کم 지원이 야기하는 새로운 문제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집단적 대응의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겼을지도 모를 일이다. 더구나 파편화와 사사화에 기반한 삼성중공업의 은밀한 활동은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중요한 논거로 작용했다. 사실 삼성과의 결연을 반대한 지역주민들은 삼성의 생색내기식의 지원이 책임을 무마해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했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로서의 삼성중공업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우리(삼성중공업)는 기금도 1,000억 냈고요, 가서 기름 닦고, 가족들 데리고 가서 기름도 닦았고, 앞으로도 계속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자매결연도 맺고, 물건도 팔아주려고 노력합니다라고 재판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답답하죠”(구○○, 2009.12.15).

### 3)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사고 직후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였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시민들이 삼성중공업에 사고 책임을 물으며 비판했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방제작업에 몰두하던 지역주민들은 피해주민이 잇달아 자살하자 삼성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집단행동을 조직했다. 특히 유류피해투쟁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시민단체가 전국적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이슈화했다.<sup>25)</sup> 당시 사고의 피해와 복원에 관한 논의는 생태계 훼손, 방제작업으로 인한 2차 오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심리·건강 악화, 긴급 생계지원 대책 등 포괄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중선체 의무화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등

25) 피해주민과 시민단체의 초기 대응에 관해서는 홍덕화·구도완(2009)을 참고.

< 표 8 > 유류피해대책위 연합회의 주요 활동

일 시	주요 내용
2008.11.21	2기 연합회장 등 임원진 선출
2008.12.7	범군민규탄대회 - 가해자 무한책임, 완전복구, 완전배상 - 태안읍, 2,000여 명 참석
2008.12.30	대삼성·현대, 대정부 규탄 및 고인 추모 대회 - 삼성·현대 책임인정 및 보상, 특별법 개정 요구 - 서울 삼성타워, 3,000여 명 참석(타 지역 포함)
2009.3.6	삼성중공업 항의 방문: 대책위별 10명
2009.3.19, 27	삼성중공업 면담 - 주민생계안정자금 790억 원 지급 요구
2009.4.15	대국민 대삼성 책임 촉구 기자회견
2009.4.20~5.12	삼성중공업 항의방문(10회)
2009.4.23	대통령 청원서 제출 - 신속한 피해보상, 해양생태복원, 지역경제활성화 요구
2009.4.24~5.20	삼성제품 불매운동 - 안면도 꽃 박람회 기간 중 현수막 게시 및 전단 배포
2009.5	서울 릴레이 집회 및 1인 시위 - 구체 사항 확인 불가
2009.7.2	삼성중공업 태안사무소 방문 - 철수 요구 전달 및 대화 지속 의견 전달
2009.7.24	서울 릴레이 집회 및 1인 자율 시위 중단
2009.8.18	삼성중공업 본사 항의방문
2009.9.18	삼성중공업 책임제한 결정 항의 촉구 및 탄원서 제출
2009.11.19~20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지역 견학
2009.11.26	정부·삼성·현대 규탄대회
2009.12.7	허베이 스피리트호·삼성중공업 유류오염사고 2주년 보고대회
2009.12.10	규탄대회 - 특별법 8조 2항 개정, 바다환경 복원, 수산 선보상, 맨손어업 등 소득 추계 인정, 지역경제회복 및 이미지 개선 - 과천정부종합청사, 3,000여 명 참석(타 지역 포함)
2009.12.15-19	일본 나호드카 사고지역 견학
2010.2.26	피해주민 성○○ 자살
2010.3.2	고 성○○ 열사 군민장 및 피해주민 결의대회 - 신속한 배·보상, 삼성의 실질적 대책제시, 현대정유의 사고방지 대책 및 지원책 제시 요구 - 태안읍, 2,000여 명 참석

\*출처: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2009), 태안군(2010a) 종합

구조적인 문제들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태안지역 16개 피해대책위원회가 연합하여 결성한 <유류피해 태안군 연합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전체화-사회화의 동력은 현저하게 약화되기 시작했다. 결성 당시부터 상이한 이해관계로 의견조율이 어려웠던 연합대책위원회는 결국 운영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분열되고, 2008년 11월에 이르러야 다시 통합되었다. 하지만 재결성된 유류피해대책위 연합회는 시민사회단체와는 거리를 두고, 정치적 활동은 자제하면서, 주로 피해 배·보상에만 집중했다. 전체화-사회화에서 파편화-사사화로 선회한 것이다. 물론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촉구하며, 시위, 항의방문, 불매운동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류피해대책위 연합회의 주요 활동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 책임론은 선언에 그쳤고, 수차례 항의방문을 시도하기는 했으나 강력한 운동을 조직해내지는 못했다. 삼성제품 불매운동은 안면도 꽃박람회 기간 중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단지들을 자율적으로 배포하는 선에 머물렀고, 서울 릴레이 집회는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참가하지 않은 산하 대책위에 대한 제재 방안이 회의의 안건에 오르기도 했다. 대책위 연합회는 기본적으로 삼성중공업과의 투쟁보다는 협상에 대한 기대가 컸고, 내부적인 의견 차이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sup>26)</sup>

파편화-사사화로 선회한 대책위 연합회는 사실상 배·보상에만 주력했고, 그것도 소송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그러나 법적소송에 대한 과도한 의지는 다른 운동의 레퍼토리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차단했다. 그리고 IOPC와의 피해 배·보상의 지연, 소송에서의 패소와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주민은 피해대책위원회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sup>27)</sup>

26) 연합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시·군별 피해대책위의 연합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삼성중공업의 출연금 배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한다.

27) 피해대책위의 주요 인사들은 맨손어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

“연합회에서 잘하려니 하고 있는데, 불만은 있죠. 연합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강렬한 그런 게 안보이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만 하려고 하더라구요. 공무원들처럼 마치. 연합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답답하죠”(구○○, 2009.12.15).

사실 피해대책위원회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처음에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대책위 연합회의 활동이 지지부진하고 무기력해지면서 대책위와 피해주민들 간의 괴리감이 커졌다. 대책위 연합회의 관계자도 초기에는 주민들이 인감을 여러 통 떼어줄 만큼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지만 대책위의 활동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주민들이 처음에 저한테, 제 캐비닛 가면 인감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 분들이 저를 믿고서 인감하고, 인감도 일곱 통씩이나 끊어왔어요. 우리는 미리 소송할 것을 대비해서 피해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소송이 나면 또 와라 또 와라 하다보면, 이왕에 끊을 거, 필요한 거 일곱 통을 끊어다 왔는데, 그만큼 인감이라든지 이런 위임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형제간에도 잘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를 믿고서 해준 거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저도 능력이 안 되지만 전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싶어요”(문○○, 2010.8.24).

이처럼 대책위 연합회에 대한 지지가 약화된 까닭은 피해 배·보상에 국한되지 않았던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책위 연합회가 전체

---

의 유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맨손어업자들의 관행어업, 무자료 거래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또 그만큼 자신의 손해를 IOPC의 손해 배·보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화-사회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탓이 크다. 생태지평(2010: 200~202)의 조사결과<sup>28)</sup>에 따르면, 태안 주민들은 피해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 등에 지속적인 참여”(29.4%), “마을회의 등 정보교환이나 협력강화”(23.0%), “오염 지역에 대한 방제활동의 지속”(17.6%), “주민들의 새로운 모임 결성과 자발적 활동 강화”(16.0%) 등을 꼽았다. 마을 공동체 회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정부나 지자체 등의 특별행정지원의 강화”(47.6%), “마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지원”(18.0%),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위한 교육 및 연수”(14.0%),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7.2%) 등을 지적했다.<sup>29)</sup> 그러나 이와 같은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연합회는 대변하지 못했다. 피해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는 정부를 통해서도, 피해대책위를 통해서도 수용되지 못한 채 시야에서 사라졌다.

#### 4) 지역시민사회

피해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불만은 잠재되어 있었지만 새롭게 집산화되지는 않았다. 삼성 측과 정부의 사회화 차단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태안지역 시민단체가 취약한 탓이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화를 차단하는 지역 내부의 사회적 권력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피해 주장의 양면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피해를 부각시키면 배·보상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관광수입이나 수산물 판매수입이 줄어드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한쪽에서는 문제가 크다고 얘기를 해서 배·보상을 많이 받아야 되고, 한쪽에서는 당장에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배·보상은 좀 받을 수

28) 2009년 2월 19일 태안군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이다.

29) 김도균(2010)의 연구도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 생태계 훼손뿐만 아니라 이웃관계의 훼손 또한 재난의 직접적 피해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관광수입이라든가 어족자원의 수입에서 피해가 당장 오니까 그걸 덮어 두려고 하는 그런 양면성,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을 아마 그 군 당국이나 도 당국이나, 중앙정부라든가, 손보사, IOPC 등이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 페이스에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최○○, 2010.8.24).

이와 더불어 보수적이고 공동체성이 강한 지역사회의 특성이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론화할 수 없도록 했다. 공동체성은 집단에서 벗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회화를 방해한다. 예컨대 자매결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칫 마을 발전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자매결연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다른 마을은 다 받는 삼성의 지원을 자신들의 마을만 받지 못하게 됐다는 비난이 반대자들에게 집중될 것이 때문이다. 결국 불만은 개인적인 수준에 머물고, 집단적으로 조직되지 않는다.<sup>30)</sup>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태안지역의 시민단체는 대단히 취약하다.<sup>31)</sup>

“누구든지 만나면, 개별적으로 만나면 기름제양과 관련해서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그 책임을 다 하지 않는 정부나 삼성에 대해서 여전히 규탄

30) 사회자본의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즉 강한 공동체성은 암묵적으로 집단의 규범을 강요하여 개인의 자율적 의사표현과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태안지역 3개 마을을 사례로 사회자본과 사회갈등의 관계를 연구한 김도균(2010)에 따르면 삼성과의 자매결연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지 않고 마을의 결정을 따라간 것은 높은 사회자본 탓이 크다.

31) 전국적인 시민사회단체 또한 피해주민을 대변하지 못했다. 예컨대,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2008년 초중반부터 관련 활동이 현저하게 줄었고, 특히 2009년 이후에는 사실상 태안시민생태조사단 활동에 머물렀다. 삼성중공업 책임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으나 1회성에 그치고 말았다.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지역 내의 다른 목소리들은 더욱 더 묻히게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환경운동연합(2009) 참고.

< 표 10 > 보도 기사 수 변화

	2007	2008				2009				2010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중앙일간지	334	405	117	89	134	21	31	20	52	28	16
지역일간지	503	624	227	197	164	128	151	62	83	59	54

\* 한국언론진흥재단(<http://www.kinds.or.kr>)에서 '태안 기름유출'로 검색

\*\* 중앙일간지: 경향, 한겨레, 문화, 동아; 지역일간지: 대전일보, 중부매일, 충청투데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집단화가 되면, 집단 속에서 그 의견들이 표출이 안돼요”(최○○, 2010.8.24).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각종 문제들과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일차적인 공적영역인 언론의 관심도 시간이 흐르면서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 표 10 >에서 드러나듯이 기름유출사고 관련보도는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 모두에서 빠르게 감소했다. 게다가 사고 2주년 행사, 지역주민의 불행한 사건, 손해 배·보상과 관련한 단신 등만이 간헐적으로 보도될 뿐 지역주민들과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와 대안에 관한 심층적인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태안군 내의 지역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비판적이면서도 심층적인 기사를 많이 실었던 《태안시대》는 2009년 이후 정기 발행 자체가 어려울 만큼 기반이 약화되었고, 《태안신문》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공적영역에서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재난과 공동체의 복원에 관한 논의의 부재는 그에 관한 정치적 논의의 가능성을 더욱 더 제한했다.

사회화가 차단되고, 누구도 자시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주민들이 선택한 것은 ‘묻어두기’로 보인다. 한 구술자의 표현을 옮기자면, 피해주민들은 가슴 속에 보이지 않는 멍을 안고 있다. 가슴에 묻어둔 멍은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 지난 6월 지방선거는 ‘묻어두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사실 태안군수가 바뀌고,

군의원이 절반 넘게 교체된 것이 기름유출사고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지역신문 기자는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군수와 군의원들이 피해주민이 만족할 만한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를 얻지 못했다고 진단한 반면 다른 기자는 군의 정치지형이 바뀌는 데 기름유출사고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름유출사고의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지만 한 가지 지점에서는 동의했는데, 바로 군수가 바뀐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점이다. 3선으로 인한 피로감과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역기반이 워낙 탄탄하여 이변이 없는 한 당선될 것이라는 게 선거 전의 예측이었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5월 인터뷰 당시에는 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이나 복원과정 등이 선거쟁점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가 시작되자 모두가 자신이 사고 해결에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물론 선거과정에서 기름유출사고가 실질적으로 의제화가 된 것은 아니다. 선거에 출마한 이들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을 뿐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눈에 띄는 대책도 없었다. 그래도 선거 결과는 예상치 못했던 인물교체였다. 이것은 누구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지만 막연하게나마 해결과 변화를 바라는 심정에서 물어뒀던 기대를 표출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어둔 감정은 비록 수동적 지지로 밖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태안의 정치를 움직이는 힘으로 잠재하고 있다.

#### 4. 재난의 파편화-사사화: 복원의 지연

정부의 사고대책 조직은 형식상 전체화된 요소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생태계와 경제, 사회, 심리, 건강상의 피해의 연관성과 상호작용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피해와 복원을 실질적으로 파편화된 형태로 인식했다.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초기의 갈등을 잠재운 뒤 피해 배·

보상을 중심으로 문제를 재설정함으로써 정부는 사회화의 경향을 차단시키고자 했다. 즉 경제적 피해의 배·보상으로 피해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IOPC와 피해주민 간의 피해 입증의 문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사사화로의 선회를 이끌었다. 삼성측은 무엇보다 책임을 최소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 방법은 정치적 쟁투를 회피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삼성측은 피해주민들을 회유하여 삼성중공업의 책임문제가 사회화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삼성측의 사사화 전략은 파편화를 전제하고 있는데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경제적 지원이 사회적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대책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대책위 연합회를 결성한 이후로 파편화의 경향이 강화되었다. 파편화된 인식은 정치적 쟁투의 영역을 축소시켰고, 문제를 경제적 피해 배·보상으로 협소화시킴으로써 사회화의 가능성을 더욱 차단했다. 피해 배·보상을 위한 입증과 사정 과정에 외부 행위자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더구나 대책위 연합회는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거리를 둠으로써 갈등에 새로운 참여자를 끌어들이므로써 역학구도를 변형시킬 의지도 없었다. 대책위 연합회의 파편화된 인식은 총체적인 접근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대책위 연합회는 오히려 정부와 삼성의 파편화-사사화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태안의 약한 시민사회는 대책위 연합회가 파편화-사사화로 선회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더불어 공동체성이 강한 보수적인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불만이 표출되고 결집되는 것을 가로막았고, 집합적인 대응역량을 약화시켰다. 전체화-사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약화되면서 파편화-사사화는 가속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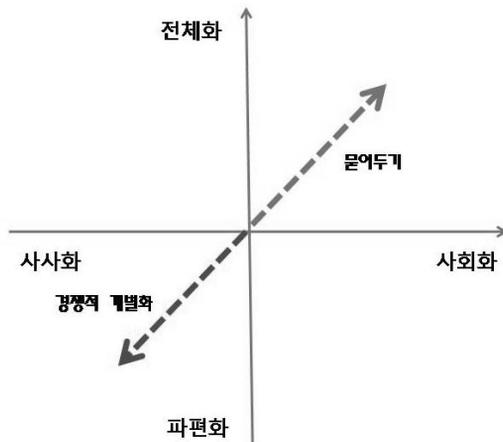
정부와 삼성중공업, 피해대책위 연합회의 파편화-사사화 경향이 합류된 지점은 피해 배·보상과 법적 소송이었다. 대책위 연합회는 피해 배·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삼성측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IOPC의 피해사정과 배·보상 과정 그리고 책임 공방이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합류했다. 결과적으로 피해의 산정과 복원 문제가 사법영

역으로 응축된 것이다. 이러한 사법화는 다시 파편화·사사화를 가속화시켰다. 물론 법적 소송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조건, 즉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법률가집단의 참여, 그리고 전문가집단의 존재를 요구한다. 이것들은 사실 법적 기회의 구조적인 것들에 해당된다. 법적 기회는 법제도에의 접근성과 법적 기금의 가용성이고, 우연적인 측면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수용성이다. 법적 기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인은 사법부의 자율성 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사법부가 사회적 갈등의 최종심급의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치적 방식으로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법적 영역을 특권화시키고 갈등의 모든 형태에 대해 법이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기대의 확산이다. 결과적으로 사법적 영역은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지형이 되고, 사법체계가 인간의 공존을 조직하고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는데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는 정치적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질서지우고 정치적 담론을 통해서 그들이 직면해야 하는 결정의 형태를 제공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현재의 체제에서 절차와 과정이 결과를 보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정당하였다면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재판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와 과정이 보장된다면 그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가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박순열, 2007).

정부와 삼성중공업은 물론이거니와 피해대책위원회마저 파편화된 인식과 사사화된 방식으로 복원과정에 대응하게 되자 피해주민들과의 거리감은 증대되었다. 피해주민들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주민들은 변화된 상황을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진 주민들은 먼저 피해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삼성중공업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자원을 둘러싸고 개별적인 경쟁 혹은 유착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배분이 일어났다. 자원동원능력이 취약한 주민들은 상황을 감내하

는 것 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실제 상황과 피해주민들의 기대 사이에 간극이 커지면서 정부, 삼성, 대책위 연합회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달리 대안을 찾지 못한 주민들은 ‘묻어두기’로 불만을 잠재워둔 상태다.<sup>32)</sup>

<그림 3> 파편화-사사화와 피해주민의 대응



사사화는 해결책의 범위와 수준을 축소시켰고, 주민들의 복원 역량을 침식하여 재난을 장기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파편화는 총체적인 대응 요구를 좌절시킴으로서 비가시화된 피해를 지속시키고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리고 파편화-사사화로 인한 재난의 장기화는 특히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피해의 총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문제해결이 사적 관계로 이전되면서 사회계층에 따른 복원의 차별화

32) “잘 모르겠어요. 한번 설문조사 해봐야지. 걸마음 속마음 틀리니까. 여하튼 지금은 유대적이고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다들 별다른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든 삼성과 대화를 많이 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려는 상황이지, 예전처럼 싸우려는 그런 마음은 없고, 지원이라든가 …”(이○○, 2010.8.24).

가 심화되었다.<sup>33)</sup>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2009년 이후 지역의 어업이나 관광업이 부분적으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현재까지의 복원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 5. 결론

2007년 12월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는 인근 연안과의 오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어온 지역사회, 그리고 인근 연안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교란시켰다. 외형적인 방제작업의 완료와 어획량과 관광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파괴되고 교란된 지역 공동체, 그리고 연안생태계와의 관계는 쉬이 복원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화, 유·무형의 지역공동체의 관행과 문화의 단절, 지역의 다음세대의 고립과 고통 등 태안지역 사회에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를 남기고 있다. 중앙정부, 충남도, 태안군 등의 정부조직은 나름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 희생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도로와 항만 건설과 같이 지역주민의 일상적 삶과 동떨어져 있거나 전시성인 사업에 투자와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지역공동체가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에 입각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역주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삶의 양식,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

33)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그야말로 맨손어업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당장의 끼니가 걱정될 정도, 그렇다고 해도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언론들한테 이야기하는, 토로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대책을 숙의하고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이 과정에서 자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그 집단 내에 없다는 것,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역시 그런 경험들, 훈련들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속으로 끄끙 앓으면서 눈물짓고 손자 밥해주고 이런 것들, 그들은 계속 배제가 되고, 그야말로 목소리 큰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출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가버리고”(최○○, 2010.8.24).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고, 그 결과 사고의 여파는 3년 가까이 지역공동체 내부에서 지속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복원과 동떨어진 정부의 지원은 무엇보다도 생태적, 사회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이 기존의 제도적 틀 내로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수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 일부는 사회갈등으로 현상하고, 또 그 가운데 일부는 기존의 행정, 사법, 입법제도 안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절차를 따라 관리되지만, 관리의 양식은 파편화되고 사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안생태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 유지되어온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미세한 결을 따라 작동하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것들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분할하여 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배·보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피해주민과 IOPC, 피해주민-법원-삼성중공업/허베이 스피리트라는 사인(私人) 간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 정부는 적극적인 조정과 개입을 하기보다는 소극적인 중재나 관망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배·보상 과정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사적인 행위자들의 이해대립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과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서 제기되는 공식화된 피해에 대한 배·보상과 복원에 대한 요구가 적절한 사회적, 정치적 의제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갈등의 가능성은 계속 잠재하게 되고, 기존의 제도적 틀로 포착할 수 없는 미세한 갈등과 상처는 한층 더 쌓여갈 것이며, 종국적으로 공동체의 내과(implosion)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동체 내부로 전이되고 악화되는 재난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복원하려는 지역사회 내부로부터의 움직임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다각적이면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적영역이 극히 협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환경재난 나아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태적 합리성(ecological rationality)에 기초한 총체적인 문제인식과 분절화된 대

응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드라이잭(1995)의 지적처럼 시장과 행정, 법률 등 현존하는 사회제도들은 환경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전가시키게 된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평의(deliberation)를 통해 생태적 합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대응만이 이차적인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신속하고 공평한 복원을 가져올 것이다. 재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태안 지역사회의 복원의 속도와 방향은 결국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파편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접근하고, 문제해결과정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제를 사회화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지역공동체 안팎에서 찾아내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 Abstract

Socio-economic change of TaeAhn resulted from Hubei Spirit Oil Spill:  
Fragmentization and Privatization of Social Disaster

Park Soon-Yawl·Hong Deok-Hwa

Hu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seriously devastated costal eco-system and also caused TaeAhn deep social, economic damage. Even though costal eco-system and local community seem to have returned back to their places, recovery has been delayed and uneven. This paper analyses the reason of delayed recovery with two factors, way of perception; holistic approach vs fragmentary approach, and way of social response; socialization vs privatization. Direction and degree of recovery from social disaster depend on combination of two factors.

Government seemed to have holistic approach toward oil spill, but it didn't take concern on seriously interactions among ecological, social, economic and psychologic damages. And also it would try to manage damage and recovery in terms of economic compensation and resolutions among legal stakeholders. Samsung Heavy Industries have tried to minimize responsibility for oil spill accident with a fragmentary approach and a privatization strategy like as displacing its' reasonabilities to legal terms and appeasing local people, then it evoked another social conflict in TaeAhn. Local peoples' organizations have mainly focused in getting economic compensations from IOPC, then they could not accommodate people's holistic approach and socialization strategy. Many of local peoples withdraw their trust and support local organizations. With these situation, local conservative socio-political conditions constrained local civil society not to make room for collective action to turn local community to holistic approach and socialization strategy. Therefore recovery process of TaeAhn has been delayed and uneven.

Keywords: Hu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social disaster, fragmentization,  
privatization, environmental conflict, TaeAhn, community recovery.

##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2010.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백서』(미발간).
- 김교현·권선중.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환경사회학연구 ECO》, 12(1), 83~107쪽.
- \_\_\_\_\_. 2009. 「태안 주민들의 재난 후 스트레스 반응: 사고 후 2개월과 8개월 시점의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89~125쪽.
- 김도균. 2010. 「환경재난에 의한 어촌마을의 주민갈등과 사회자본」. 《환경사회학연구 ECO》, 14(1), 125~165쪽.
- 노진철.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초기대응과 재난관리의 한계」. 《환경사회학연구 ECO》, 12(1), 43~82쪽.
- \_\_\_\_\_. 2009. 「고도 불확실성의 재난상황에서의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인지와 소통: 허베이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49~88쪽.
- 박순열. 2007. 「환경갈등의 사법적 해결: 그 의미와 한계」. 2007년도 춘계환경사회학대회 발표문.
- 박재묵. 2008. 「환경재난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분석」. 《환경사회학연구 ECO》, 12(1), 7~42쪽.
- 박재묵·이정림.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자원봉사자 분석: 의사결정요인과 봉사자의 성격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173~216쪽.
- 생태지평. 2010.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 충돌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보고서』.
-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10/2/17),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방문 결과보고」(10/2/22).
- 유류피해대책위 연합회.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삼성중공업 유류오염사고 2주년 보고대회” 자료집.
- 이시재.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영향연구」. 《환경사회학연구 ECO》, 12(1), 109~144쪽.
- \_\_\_\_\_.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연구」.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127~171쪽.
- 태안군. 2010a.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백서』(미발간).
- \_\_\_\_\_. 2010b.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의 이해』(소책자).
- 태안환경보건센터.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중장기 건강영향조사 1차결과 발표회” 자료집.

- 홍덕화·구도완.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7~47쪽.
- 환경운동연합. 2009. 『사람과 자연, 생명의 연대를 위하여: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2주년 환경운동연합 활동백서』.
- Cardona, O. D. 2004. "The Need for Rethinking the Concepts of Vulnerability and Risk from a Holistic Perspective: A Necessary Review and Criticism for Effective Risk Management." in G. Bankoff, G. Frerks and D. Hilhorst(eds.). *Mapping Vulnerability: Disasters, Development and People*. London: Earthscan.
- Davis, Nancy Y. 1996. "The Exxon Valdez Oil Spill, Alaska." in J. K. Mitchell(Eds.). *The Long Road to Recovery*.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 Dryzek, J. 1995(1987). *Rational Ecology: Environment and Political Economy*. 『환경문제와 사회적 선택: 정치·경제 생태론』(최승 외 옮김. 신구문화사).
- Edelstein, M. R. 1988. *Contaminated Communities: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s of Residential Toxic Exposure*. Westview Press.
- E. E. Schattschneider. 2008(1975).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절반의 인민주권』(현재호·박수형 옮김. 후마니타스).
- Iijima, Nobuko, 1992, "Social Structures of Pollution Victims." Ui, Jun(ed.). *Industrial Pollution in Japan*.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 Oliver-Smith, A. 2004. "Theorizing Vulnerability in a Globalized World: A Political Ecological Perspective." in G. Bankoff, G. Frerks and D. Hilhorst(eds.). *Mapping Vulnerability: Disasters, Development and People*. London: Earthscan.

《대전일보》, 《연합뉴스》, 《태안신문》, 《한겨레신문》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태안군 통계연보, <http://www.taean.go.kr/>

논문접수일: 2010. 10. 1

논문수정일: 2010. 10. 26

게재확정일: 2010. 10. 27